

개성에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 통신·전기 등 곧 연결

활짝 열린 ‘개성가는 길’... 공단재개 부푼 꿈

통일부 “15일 이전 현장점검”
전기공급 문제 ‘풀어야할 과제’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 공단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북한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이다. 가서 봐야 무슨 판단이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던 ‘개성가는 길’이 조만간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장본인으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 한 때 125개 남측 기업과 5만 명이 흠뻑 넘는 북측 근로자들이 일하며 남북경협을 상징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다시 ‘주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의 방북 일정과

관련해 4일 “사전점검단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필요한 공사나 개·보수 사항이 어떤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아마 임시 공동연락 사무소가 운용되도록 그렇게 남북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년 4개월 동안 텅 비어있던 개성공단에 남북의 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신, 전기가 연결되고 사람이 오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성공단내 어느 곳에 사무소를 꾸릴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무

소 위치에 대해 “현장을 가봐야 알 것 같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시설은 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사전점검단은 15일 이전에 방북해 개성공단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은 2009년 말 완공된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2005~2010년 운영했던 4층짜리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건물 등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폐쇄 직전까지 운영했던 기업들의 공장 내부부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가동의 뒷줄 역할을 할 전기 공급 문제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2년여 전 남측 기업들이 전면 철수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전기는 경기도 문산변전소에서 공단 내 평화변전소로 송전하고 이를 다시 끌어쓰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백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사전점검단이 북측 지역에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어떤 시설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점검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장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기존과 같이 끌어다 쓸 경우 개성공단 폐

쇄 후 처음으로 남측의 전기 공급이 재개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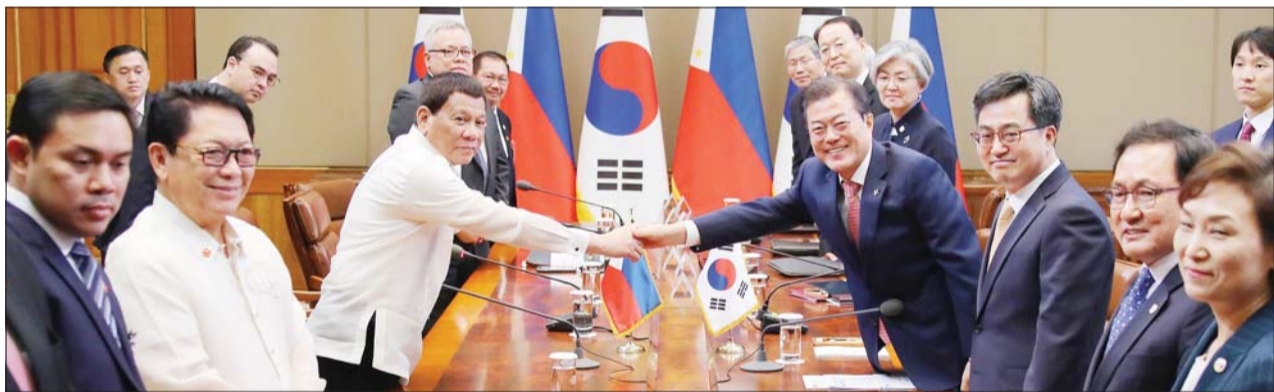
이처럼 상황이 호전되면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온 기업인들의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TF 유창근 단장은 “방북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풀리고, 이후 나오게 될 정부 지침에 따라 행동하면 될 것 같다”면서 “실제 방북을 해 개성 현지에 있는 공장이나 내부의 시설 등을 둘러본 후에야 (향후 공장 재개를 위한)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정도로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 운영 방식을 훌쩍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공저 ‘선을 넘어 생각하다’에서 “개성을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면서 남북 정치 체제에서 독립성을 갖는 일종의 ‘통일특구’ 또는 ‘통일특별자치구역’으로 발돋움시키는 방안이 있다”면서 “아울러 개성을 ‘비핵평화지자체’로 선언해 UN 관련 기구를 적극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필리핀, 에너지·농업 협력 확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한
文 “자동차 등 제조업 발전 지원”
교통·경제통상 등 5건 협력 약정

한·필리핀 정상은 4일 청와대에서 소규모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에 기술을 공유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와 같은 4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도 체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교 70주년인 내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약속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엔 두 정상을 포함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하는 공식만찬도 가졌다.

만찬 공연에선 ‘양국 간의 우정’을 주제로 양국 합작 재즈 연주와 한국의 밀양아리랑, 필리핀의 유명곡 ‘당신(Ikaw)’ 등이 연주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하며 우방국임을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687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 등 총 164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6·13선거 독려 8일 사전투표

임종석 비서실장 등도 참여키로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남북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사전투표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첫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

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정상회담과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6·13 투표 참여하세요”

4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선거독려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